

1. 머리말

보통 21세기는 세계화의 세기이며, 지식정보의 세기, 문화의 세기라고 일컬어진다. 국가단위의 분절된 세계에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압축되며 긴밀히 연결된 지구촌 시대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산업기술에 의한 첨단기술상품 생산에 의존하여 경제력을 유지하던 모습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정보화 하여 사이버 공간에 유통시킴으로써 경제력을 유지하게 될 시기라는 것이다. 또 물량 중심의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던 물신주의 시대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문화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기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기적 특징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¹⁾

오늘의 세계화는 모더니티 아래 억눌리고 획일화를 강요받았던 근대화 시기의 세계화와는 다르다. 각 주체들의 자아가 해방되고 해방된 자아들이 창조적으로 전 세계적인 교류를 만들어 나간다. 주체의 해방은 한 나라 안으로 들어올 때 곧 지방화가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세계화는 지방화와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지방화에 지방사가 필요하다는 건 그리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²⁾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물'이라고 말하듯 이제까지의 한국사연구는 대부분 중앙·지배권력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 내용도 제도변화나 영웅적인 인물이나 특수사건 중심의 이해에 집중한 경향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민이나 지방의 역사·문화상은 사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속에서도 충북의 경우 지방사에 대한 관심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전체사속에서의 부분연구로서든 지방사 자체로서의 의의를 두던지 충북지방을

* 충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 임재해, 1999, 「지방정부의 지식기반 확충과 문화산업 발전 구상」 『郷土史研究』11(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pp.107~110.

2) 고석규, 1998,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1』(역사문화학회편), 학연문화사, p.14.

소재로 한 연구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특히 중원문화권 설정이 계기가 되어 그 연구물의 수는 8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지방과 비교하면 그 양적인 측면에서 현저히 적다. 여기에서는 향토사, 지역사, 지방사라는 관념에 매이지 않고, 충북과 관련이 있는 연구결과의 현황을 분석하여 보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제시된 방안은 필자 개인이 처한 입장에서 본 것이기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여겨지나 한 번쯤의 검토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2. 충북 지방사 연구현황

1) 지방사의 연구기관 및 단체

충북지방에 대한 역사적 조명은 지배구조 중심의 중앙사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충북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유적의 발굴이나 조사는 교통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지방보다 늦은 편이었으나, 지방사 연구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³⁾

충북에 대한 지방사 연구기관으로 대학박물관의 경우를 보면 1967년도에 최초로 청주대학에 박물관이 생겼고, 1970년에는 충북대학 박물관이 개관되었다. 또 80년에는 충주산업대, 81년 청주교대, 87년 교원대 박물관이 개관하였고, 94년 서원대, 97년 충청대에 박물관이 건립되어 충북지방에 대한 역사연구의 주요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련학과로는 청주대학교 사범대학의 역사교육과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의 역사교육과, 인문대학의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서원대학교의 역사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의 역사교육과 등이 있다.

대학의 연구소는 충북대학의 호서문화연구소에서 중원문화연구소로 발전을 이루고 있고, 서원대학의 호서문화연구소, 건국대학교의 중원연구소 등이 있고 각 대학별과 과별로 사학회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또 1986년도에 충주유물관이 탄생하여 90년 박물관으로 발전하였으며, 1987년에 국립청주박물관이 개관되었고, 1992년에 고인쇄박물관이 개관되었다. 그리고 각 시 군별로

3) 김현길, 1990. 「충청북도의 향토사연구 현황」 『충북향토문화』 2, 충북향토문화연구협의회, 50.

향토자료관들이 건립되었는데 청원, 중원, 영동, 음성, 괴산, 진천, 보은, 제천 등이 운영되고 있다.

향토사연구 단체는 청주지역에서 최초로 이원근·이재준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서원학회가 1974년에 창립되었다. 충주지역에서는 1978년 예성동호회가 창립되어 활동함으로써 중원고구려비(국보 205호)를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러한 일이 계기가 되어 옥천의 관성동호회(1985), 진천의 상산고적회(1985), 청주의 호서고문화연구회(1986) 등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87년에는 충청북도 향토사연구협의회가 결성되고 각 시군에 향토사연구단체들이 생겨나 활동하여 도내 전 시·군에 향토사연구단체가 생기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충북향토문화연구소가 탄생되기도 하였다.

도 단위 연구기관으로는 1999년 충북학연구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방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기관으로 각 시 군에 설립된 문화원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문화원 중 일부는 향토사연구회와 잘 협조하여 능동적으로 연구 지원하는 곳도 있으나, 아직도 일부 문화원은 문화의식이 없는 지방유력자의 사랑방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의 지방사료조사위원들의 역할이 있는데 최근 조직화하여 협의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료조사위원들은 각 단체와 중복되고 있는 형태이다.

2) 연구현황

충북의 지방사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를 통계수치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충북학연구소에서 간행한 『충청북도문헌목록집』(1999.12) 역사편에 의거하여 분석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총 2,657편의 논문이나 저서가 수록되어 있다.⁴⁾

이를 충북학연구소의 분류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일반 189편(총설91 중원문화44 지역사연구현황7 인물일반26 사료금석문
일반21)

발굴지표조사 279편(일반101 고고선사48 고분27 성곽봉수32 사찰사지41 가마터
기타19)

4) 충북학연구소, 1999. 『忠北學文獻目錄集』 348~441.

분 우 358)	고고·선사	263편(일반34 유적유물114 구석기44 신석기11 청·철·원삼국60)
	고대	150편(일반2 삼국39 서원중원경4 촌락문서8 고대지리6 인물27 고 22 금석문42)
	고려시대	137편(일반10 고려건국과지방세력46 대몽항쟁6 인물64 금석문11)
	조선시대	586편(일반23 임진의병28 사족문벌22 예학과이인좌14 향교서원사 48 향약동계21 읍지리지18 사고·태실11 사회경제43 인물
	근·현대	386편(일반11 동학35 의병64 3.1운동15 청년농민운동10 해방이후15 사회경제25 교육종교문화20 인물191 기타4)
	불교문화	134편(일반11 사찰과불적60 불상29 탑과부도26 기타8)
	생활문화	56편(토기와도기35 공예3 복식회화16 기타2)
	건축문화	69편(관아서원향교21 누정13 기와15 기타20)
	고인쇄문화	73편(일반28 고려인쇄문화32 조선인쇄문화13)
	성과 봉수	75편(도성산성59 읍성8 봉수8)
	유적·유물일반 및 문화재	68편
	성씨·족보	165편(성씨와문헌38 족보127)
	명승·답사기행	10편
	지명·역사지리	17편
	총 계	2,657편

이 분류표에 입각해 보면 조선시대가 586편으로 가장 많고, 근 현대가 386편, 발굴지
표조사가 279편, 고고·선사가 263편의 순서이다. 이러한 모습은 일견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많은 모순을 가진다.

조선시대의 경우 시대사나 사건과 관련된 논문이 228편인데 비하여 인물사에 관계된
논문이 358편이나 된다. 물론 인물연구가 후학들의 연구와 국학연구에 일정한 도움을 주
는 것은 사실이나, 내 고장의 인물이나 조상에 대한 선양차원의 연구 또한 많았음을 부
인할 수 없다.

근 현대사의 경우도 95% 이상의 논문이 근대에 편중되어 있고 현대사 관련 글은 소
수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도 인물사가 191편으로 50%를 상회한다. 현대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와 가장 가까운 부분이기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충북 지방사에 대한 연구가운데 역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고고·미술과 관련된

연구물이다. 이는 가장 기초를 이루는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나 지방사 연구가 고고·미술만이 전부일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발굴보고서에서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주를 이루는 것이 1차적 목표이기에 사실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물의 양식과 형태의 묘사보다는 근본적인 그 유적과 유물이 왜 그곳에 있어야만 하였는지, 그것을 만든 시대와 상황, 사람, 그것이 위치한 지역과의 관계 등등에 대한 지방사 연구에 필요한 상황은 언급되지 못하거나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⁵⁾

여기에 문화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은 많은 사람들의 지방사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의 답사안내서나 개설서 등이 필요하다. 일선학교에서조차 향토사를 소개한 책자가 없어 향토사교육이 어렵다고 한다.⁶⁾ 향토사에 관한 자료로 판매되는 것이 거의 없고 비록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매품이 대부분이고, 지역의 연구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3. 지방사 연구의 문제점

1) 지적기반의 확산운동미비

지방사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만 입각하여 위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왜 필요한가를 인식시켜주어야 하고 그 인식을 보다 확대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문화의 세기라니까 우리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구호로서가 아니라 우리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인식이 곧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되며 자신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야 한다.

보통 관광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 골똥 없는 산업이라고 하며 이제는 무형의 수출이라는 능동적 개념으로 변하였다. 이 관광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문화이다. 관광산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국가들은 모두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나라들이다. 이곳 충북에 와서 골프를 즐기다 문화유적지를 찾는 모습보다

5) 이해준, 1994. 「지방사 자료와 향토사 연구」 『향토사연구』 6,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41~42.

6) 김양규, 1998. 『충주 지역의 향토사교육 실태와 개선방향』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는 중원문화권내의 핵심유적을 찾는 모습이 될 때 진정한 문화관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가공되어 널리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문화유적지 답사 붐을 일으켰듯이 문화관광이 골프보다 훨씬 재미있고 지적인 일이라는 의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충북의 경우 이러한 작업은 일부 행정관청의 몫으로 치부되고 있다. 전문 연구자들은 근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조사나 발굴, 연구 등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를 알리고 상품화하는 일은 남의 일로 생각하였고 비전문가들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일을 잘못되었다는 비판만 앞세웠고 다양한 고급정보의 제공에는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시간적 제한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노력과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편중

충북지방과 관련된 역사 논문이나 책의 수로 분석하여 보면 고고학이나 미술사관계의 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지적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연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북에서의 고고학적 발굴은 사실 타 지방과 비교하여 본다면 매우 미흡하며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관심이 왕도중심으로 일관되어 왔고 정부의 투자 또한 왕도중심으로 행하여졌기에 때문이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이나 공주·부여 중심의 백제문화권, 김해·고령지역의 가야문화권 등에 비해 중원문화권 지역의 발굴 등은 매우 미흡하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부족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충북지방사의 타 시대에 대한 연구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한국 지방사 연구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고대사 위주이고 고고학 미술사 중심의 연구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한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구의 편중현상은 능력이 특출한 연구자나 기관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서도 나타나 는 현상이다. 이는 학문발전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나 전체 지방사 연구의 틀에서 보면 주변과의 조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현대나 근대, 조선, 고려시대 순서로 우리와 가까운 시대에 대한 것부터 자료와 연구물이 축적되어야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될

때 전체의 틀 속에서 어느 특정분야의 비중 내지는 특성을 올바르게 자리 매김 할 수 있고 그 연구업적 또한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문제의식의 결여

연구의 빈도가 높은 고고학이나 미술사 분야의 글도 자세히 보면 표면적인 현상의 설명에 그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어떤 한 유물이 발견되었다면 그 유물의 양식이나 형상에 대한 연구 못지 않게 왜 그 지역에서 나왔으며 누가 어떤 연유로 그 유물을 소장하거나 사용하였으며 그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지 등 그 유물이 출토한 지역의 사람들의 보편적 삶과 특수한 생활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어느 고장에서 출토한 유물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그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물로 자리 매김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 어느 지역에서 발굴 조사되어 출토된 유물은 국유라는 명분으로 아니면 관리의 미흡이라는 이유로 그 지역을 떠나 국립기관의 창고로 들어가 생명력을 잃고 있다. 진정으로 지방사가 전체사의 토대가 된다면 작은 유물하나의 생명력을 사장시키는 행위는 반문화적인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최소나 최대, 최선의 유물·유적이 아니면 경시되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고, 언론의 선정성에 놀아나,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민중생활사 연구는 외면되어 왔음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지방사 연구의 세부적인 문제점은 매우 많으나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생략한다.

4.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역할분담

충북 지방사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은 많은 연구자들의 확보이다. 각 시대별 유형별로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을 때 다양한 연구물이 생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현재의 상황만으로 보다 생산적인 모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방사 연구의 질적·양적 팽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연구인력들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할분담이란 지방사 연구자 그룹을 세분하여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하자는 것인데 현재는 세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다. 대학의 교수와 연구진 그룹, 박물관이나 향토자료관 등의 기관 연구자와 향토사연구단체나 문화원, 문화운동단체의 회원 등이다.

지방사 연구를 활성화하지 위한 가장 중요한 그룹은 역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겸비한 대학의 교수와 연구진들이다. 현재 이들은 지방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일까지 전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너무 과중한 모습으로 이에 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1차 적인 조사나 발굴 등은 박물관 등의 기관이나 그 종사자들이 보다 확충되고, 제반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일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대학의 교수와 연구진들은 이를 종합하고 심도 있게 비교 연구하여 수준 있는 연구물들을 양산하여야 한다. 연구에 꼭 필요한 미진한 사항은 학술발굴을 통해 이루어 나가면 될 것이다.

여기에 향토사연구단체 등의 회원들은 이러한 연구물들을 쉽게 풀이하고 각 지방의 상황에 맞게 일반시민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모색하여 나가고 각종의 문화운동을 통해 그들 속으로 파고드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여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대학의 기능을 떠맡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이 너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소한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전공자들을 받아 1차 적인 조사사업을 행할 수 있고, 이곳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대학으로 진출하든지 아니면 연구결과를 대중과 접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집필자나 문화운동가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켜야 한다.

향토사연구단체 등의 회원들은 가장 일선에서 지역 속에 생활하며 지역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떤 대가도 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력해온 사람들로 지역의 일을 선도하며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들은 지적기반이 취약하며 자신의 고장이나 출신 가문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다 는 맹점을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을 가진 젊은 피의 수혈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보화의 시대인 만큼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세대의 접목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들을 연합하여 용역을 맡겠다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들의 순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즉 어떠한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들에게 연결하는 역할과 함께 연구의 결과물을 그

지방의 정서와 필요에 합당하게 집필하고 소개하고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문화운동을 시행하는 선봉에 서게 도와준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주의 지명 찾기 운동이나 직지 찾기 운동 등이 그 좋은 예이며, 김예식님의 『충주의 가볼 만한 곳』이나 『재미로 읽는 선인들의 삶』과 같은 저술활동은 향토사가가 나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교육의 과정도 필요하며, 문화원 등과의 협조도 절실하다.

2) 연구인력 및 기관의 활용방안

지방사 연구의 질적·양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가장 노련한 전문가 그룹인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분발하여야 한다. 이들이 발굴이나 지표조사 등 기초적인 일에 매달리고 보고서에 빼앗기는 시간을 돌려주어 보다 수준 높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들이 1차 적인 조사에서 자유로워 질 때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들을 1차 적인 조사에서 자유롭게 하려면 그들이 수행했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집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최근 이러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이나 공립의 기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화재보호재단이나 매장문화재연구원 등과 충북학연구소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충북의 경우도 이러한 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며 기존에 있던 연구기관의 활성화도 요구된다.

충북에는 각 시·군단위로 향토자료관이 만들어져 1명씩의 학예연구사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작은 박물관을 지향하는 정책에 의해 박물관 설립요건이 완화되어 2명의 학예사에서 1명으로 축소된 결과이다. 자료관이건 박물관이건 1명의 학예직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시관을 관리하거나 행정관청의 문화재 업무를 보조하는 것 이외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독립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이조항의 개정이 절실하다. 또 각 시·군의 문화재관련과에 학예연구직의 배치가 시급하다.

그러나 정작 인원이 있고 조사능력을 갖추었다하여도 현행 예산회계법 아래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시행하는 학술조사는 시행할 수 있으나,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나 외부에서 의뢰하는 조사는 맡아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립박물관조차도 자체 예규에 의해 외부에서 요구하는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밖의 공공박물관은 조사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

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는 모든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방재무회계법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발굴 등의 일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회계 규칙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의 삽입이 절실하다. 즉 현행법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2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외부학술용역 사업의 수행경비의 지출을 명시화 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정책에의 능동적 참여

현재까지의 충북 지방사 연구는 연구자의 개인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국가적 사업의 수행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한 용역이 중요한 연구의 계기가 되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국가적 사업은 다목적 댐이나 고속도로의 건설 등과 같이 정책적 필요에서 수행하기에 크게 논의가 필요치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문화사업의 경우는 그 입장이 다르다.

지방사의 기초가 되는 문화유적의 조사·발굴의 경우 사업선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은 개인이나 지역의 입장이 반영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방향이나 논리가 없이 시급성이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적의 훼손이나 망실로 인한 시급한 것이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의도나 의회의원 등의 외적요인이 작용되기 일쑤이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때 연구의 편중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관과 밀접한 사람과 지·혈연적 요인이 사업을 선정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냉정하게는 나누어 먹기식의 모습도 나타나곤 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충북의 도·시·군에서 1~2건씩만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는 의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 측면도 있으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지 못하였기에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제 는 이런 정도까지도 방향제시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충북 지방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시대별·지역별 안배가 필요할 것이고 대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물론 어느 한 기관(예, 충북학연구소)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지역이나 집단에 편중되지 않은 전문가 집단의 문화정책에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된다. 이는 문화재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방사 연구의 전반적 모습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